

산업스파이 처벌유형과 양형기준

KIM & CHANG | 2013. 3. 6.

임윤수 변호사

Yoonsoo.lim@kimchang.com



변호사 임 윤 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2001, 박사과정 재학중)
- 사법연수원 수료 (1998)
- 검사 근무 (2001. ~ 2009.)
: 서울중앙, 서울동부, 춘천영월, 부산 등
- 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근무
: 기술유출범죄,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포렌식 담당
-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9. ~ 현재)

목 차

- 1 최근 산업스파이 사건의 Trend
- 2 주요 적용 법률 및 판례
- 3 산업스파이 유형별 사례 및 법적 대응

최근 산업스파이 사건의 Trend

산업스파이 사건의 Trend

한국경제

기사프린트 | 창닫기

입력: 2007-12-14 01:07 / 수정: 2007-12-14 01:07

현대차 변속기 기술 중국에 유출... 기술유출 직원 2명 구속

현대자동차의 싼타페(구형)와 투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등에 들어가는 4단 자동 변속기 제작 기술이 중국 기업에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첨단 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대형사건화 / 언론의 관심 집중

현대차는 이 같은 기술 유출 사실을 3개월 전 내부 보안 시스템을 통해 확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현재 이들을 구속한 뒤 자세한 기술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대차의 주력 모델인 NF쏘나타의 외형과 부품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도 장화이차에 빼돌리고 그 대가로 120만달러(약 11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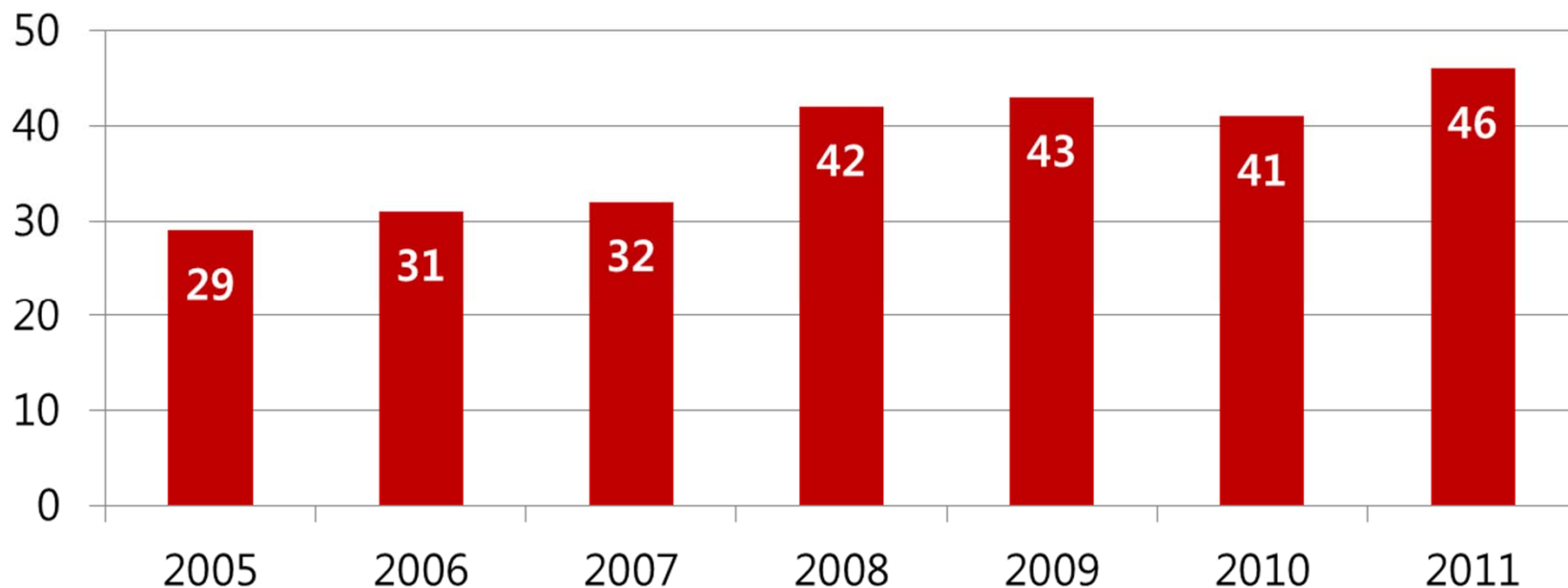
현대차 측은 장화이차가 변속기 관련 기술을 실용화하기 전에 유출된 사실을 적발, 아직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대차에서 빼낸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가 2~3년 내에 '짝퉁 싼타페'나 '짝퉁 쏘나타'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산업스파이 사건 현황 (해외 기술유출 사건)

연도별 적발 실적 (2005년~2011년)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264건	29건	31건	32건	42건	43건	41건	4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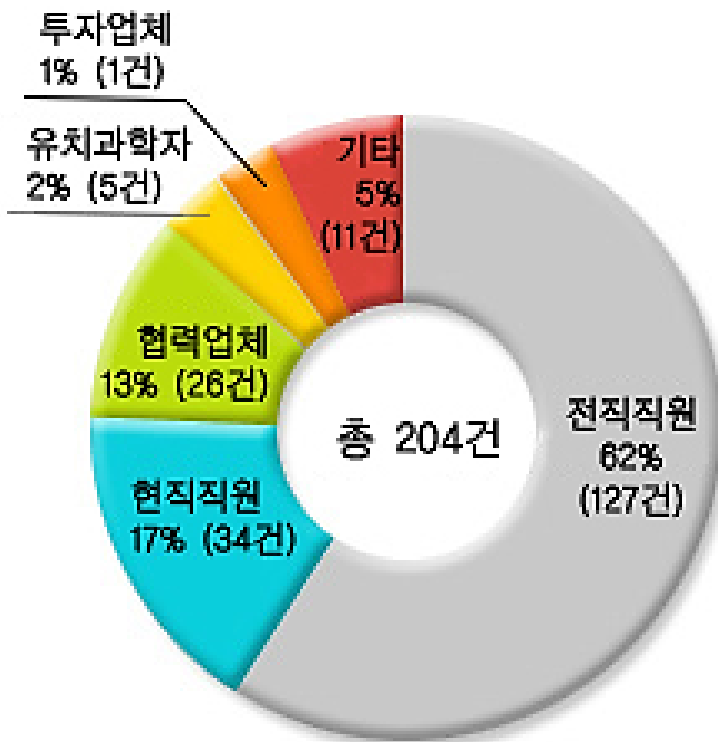


출처 :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스파이 사건 현황 (유형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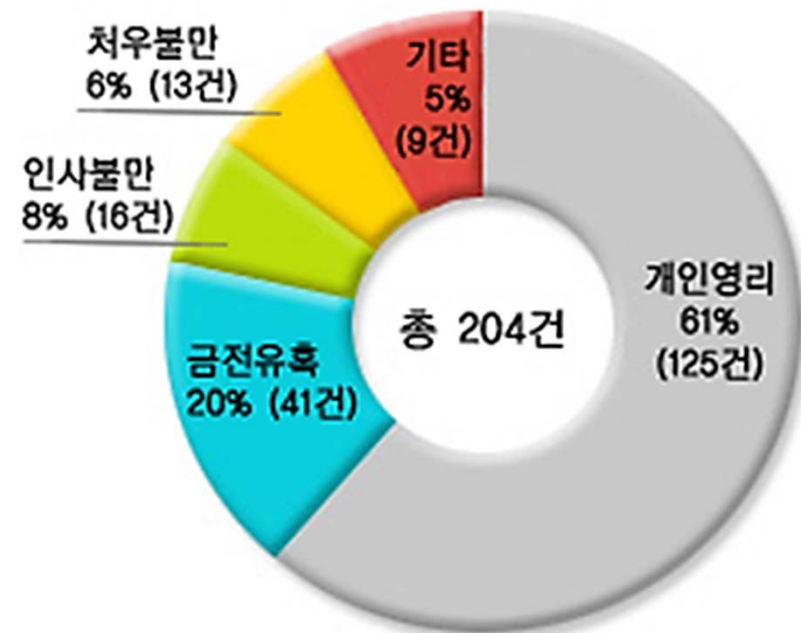
기술유출 주체

- 전직직원, 현직직원,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유출 → 92%



기술유출 동기

- 개인영리, 금전 유혹으로 인한 기술유출 → 81%



산업스파이 사건 현황 (유형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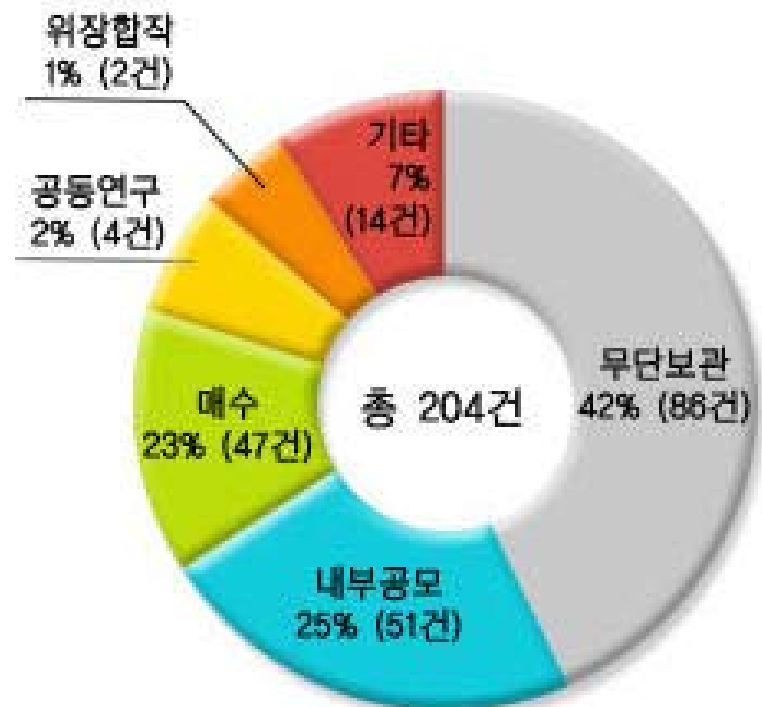
기술유출 분야

- 전기전자, 정밀기계, 정보통신 등 최첨단 산업부문 → 79%



기술유출 유형

- 무단보관, 내부공모, 매수로 인한 기술유출 → 90%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처벌 강화

국가기관 / 사회적 관심 증대

수사기관

경찰(산업기술유출수사대), 검찰(첨단범죄수사부)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행정부

지식경제부

처벌 강화 움직임

법 개정으로 법정형 상향

법원 양형 기준 마련

법원의 양형기준 마련(2012)

3.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5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5년

일반 양형 인자	가담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 있는 자
	행위	○ 소극 가담 ○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자 / 기타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주요 적용 법률 및 판례

주요 적용 법률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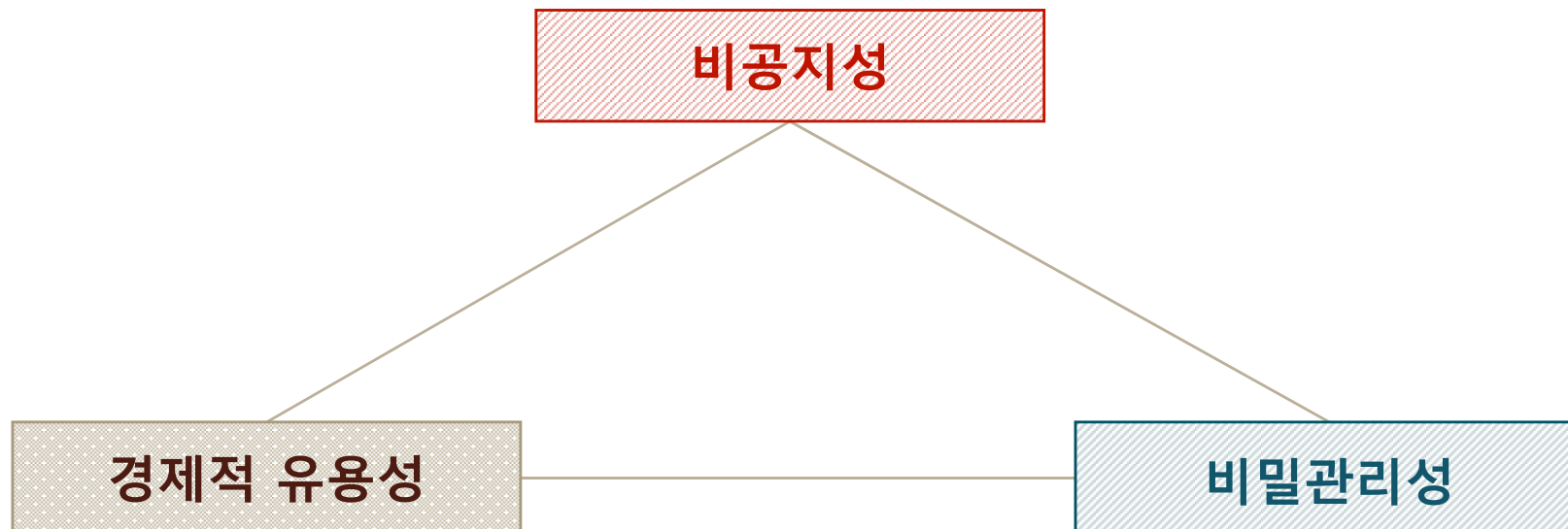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의 개념(법 제2조 제2호)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공지성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

영업비밀이란?

비공지성 상실 사례

1

특허

2

논문, 학술지, 강의자료(산학)

3

학회, 전시회 발표

4

Marketing 자료

5

업계 전문지, 증권사 애널리스트 자료

비공지성 관련 사례



- 일부 또는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비공지성이 유지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1996.2.29. 선고 95나14420 판결)
- 다른 업체가 유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개략적인 회로도 공개되어 있어도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도6772 판결)
- 기계의 기본원리가 알려져 있어도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 및 설계도면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됨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5751 판결)
-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되고 그 일부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경우 공연히 알려진 것임 (대법원 2009.4.9. 선고 2006도9022 판결)
- 국외에 공개 사용됨으로써 공연히 알려진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8.7.7. 선고 97나15229 판결)

영업비밀이란?

경제적 가치/유용성

의의

- 정보의 취득,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 정보의 보유로 신규진입 회사 관점에서 유용하다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됨

예시

- 기술상의 정보 – 설계도, 실험 데이터, 원재료 성분표 등
- 경영상의 정보 – 경영전략 및 중요계획, 경영관리정보(원자재가격, 원가), 신제품 개발계획, 업무매뉴얼 등 중요 자료

- 임직원의 자의적 평가와 무관하며, 회사 기준으로 판단
- 실패한 실험 데이터 등 소극적 정보도 포함
- 다소 오래된 자료라도 현재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됨



경제적 유용성 관련 사례



- 영업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개발 단계의 정보라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도6223 판결)
- 유출시 경쟁업체가 동종 제품의 개발 제조에 참고할만한 정보라면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5.9.15. 선고 2004도6576 판결)
-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 기술사상이 알려졌어도 완성된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9477 판결)

비밀관리성



대법원 2011.7.14.선고 2009다12528 판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

비밀관리성

• 법원의 판단 (종합적인 요인으로 판단)

- 보관책임자 지정
 - 보안장치
 - 보안관리규정
 - **비밀의 분류 및 표시**
 -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의 제한조치
 - 방화벽 설치, 네트워크망을 통한 접근 여부
 - 보안교육
- * 취업규칙과 영업비밀준수서약서 작성사실만으로는 부족

• 비밀관리성 요건을 점차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

비밀관리성 관련 사례



- 대표이사의 노트북에만 정보를 보관하고 그 접근을 제한한 경우 비밀관리성을 부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0.6.18. 선고 2010노1053 판결)
- 자료의 일부가 몇 차례 출도 열람된 사정이 있어도 영업비밀에 해당함 (대법원 2009.7.9. 선고 2006도7916 판결)
- 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3436 판결)
- 보안관리를 하였어도 일반 추상적인 기밀유지의무 부과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16. 선고 2009가합41286 판결)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법 제2조 제3호)

- 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부정취득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 **형사처벌**(법 제18조)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 형사처벌 대상 행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예비 음모도 처벌
-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법 제10조)
-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법 제11조)
-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청구(법 제12조) -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법원이 명할 수 있음
- 양벌규정(법 제19조)

양벌규정 - 법인 처벌 관련 문제

임직원 개인의 범죄

VS

회사의 책임

법인의 처벌 가능성

- 종업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
 - 언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인가?
 - ➔ 고려요소: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피해나 결과의 정도, 영업 규모, 감독가능성, 구체적인 지휘관계, 위반행위 방지 위한 조치
 - ➔ 영업비밀 관련 교육, 타사의 영업비밀 침해로 연결될 업무지시 금지 등의 조치

법인에 대한 처벌

요건			효과
행위주체	업무관련성	주의감독해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법인에 대한 처벌

• 영업비밀 침해행위 결과 제품생산, 판매까지 나아간 경우

사례 1

휴대폰 소스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다른 회사에 납품하여 약 50억원을 받고, 순이익이 2억8,000만원 정도라는 대표이사 진술이 있었던 사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적어도 1억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고 법인에 대해 2억원의 벌금형 선고

사례 2

피해 회사의 제품별 매출단가, 판매수량, 거래처별 매출 및 수금현황 등 영업 관련 매출자료를 내려받아 저장한 후,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에 가서 낮은 단가로 제품을 공급할 것을 제시하는 등으로 영업한 사례: 피고인 회사의 재산상 이득액을 약 1억 6,000만원(영업비밀침해로 인한 매출증가분X영업이익률)이라고 인정하고, 1억 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사례 3

피해 회사 직원이 퇴사하면서 유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사인 피고인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하여 거래처에 납품, 설치한 사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이 6,000만원으로 인정된 점을 고려하여, 법인에 대하여 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

산업기술의 개념(법 제2조 제1호)

-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마.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사.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법 제14조)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2.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법 제9조)

-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
 -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 8개 분야 58개 국가핵심기술 지정 (2012.1.30.,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13호)
전기전자(8), 자동차(8), 철강(6), 조선(7), 원자력(4), 정보통신(17), 우주(5), 생명공학 (3)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법 제14조의2)
- 대상기관의 장이 침해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 신고 및 필요한 조치 요청(법 제15조)
- 형사처벌(법 제36조)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 양벌규정(법 제38조)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의 비밀유지의무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 제5항)

영업비밀 침해행위 vs 산업기술 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VS	산업기술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년 이하 징역/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가중처벌시 10년 이하 징역/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시 10년 이하의 징역/10억원 이하의 벌금
예비 음모: 2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시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예비 음모: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0조)		(법 제14조의 2)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금지청구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법 제11조	손해배상	규정 없음

형편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형법상 제재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6조)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 9433 판결 :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형법상 제재

절도죄

-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329조).

비밀누설죄

- 기업 내부에서 다른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탐지하기 위하여 비밀장치한 문서, 전자기록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16조).

주거침입죄

- 산업기술 보유 회사 내에 출입할 수 없는 자가 잠입하거나, 출입이 허용된 직원이라도 유출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19조).

산업스파이 유형별 사례 및 법적 대응

산업스파이 사례 (퇴사자)

사례 1 A사 퇴사자(임직원) 핵심기술 자료 유출

1

고위 임원 및 관리직으로
재직하면서
중요 자료 입수



2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쟁사로 전직



3

주요 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USB 외장하드 등에 담아 퇴사



4

경쟁사에서 대규모 입찰 준비 등
사업실행 착수



- 형사 대상자 6명에 대한 가압류 신청(손해배상청구권)
-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원에 대해 퇴사 후 3년간 전직금지결정**

산업스파이 사례 (내부직원)

사례 2 경쟁사로 퇴사한 후 친분관계 악용, 내부직원을 통한 기술유출

1 인사 불만을 이유로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 전 직장 임직원에게 대한 부당 유인

2 전 직장의 기술로 동일 제품 생산 / 판매, 제품 결함에 대한 Know-How 부족

3 친분관계 악용, 전 직장 내부직원들 회유 / 협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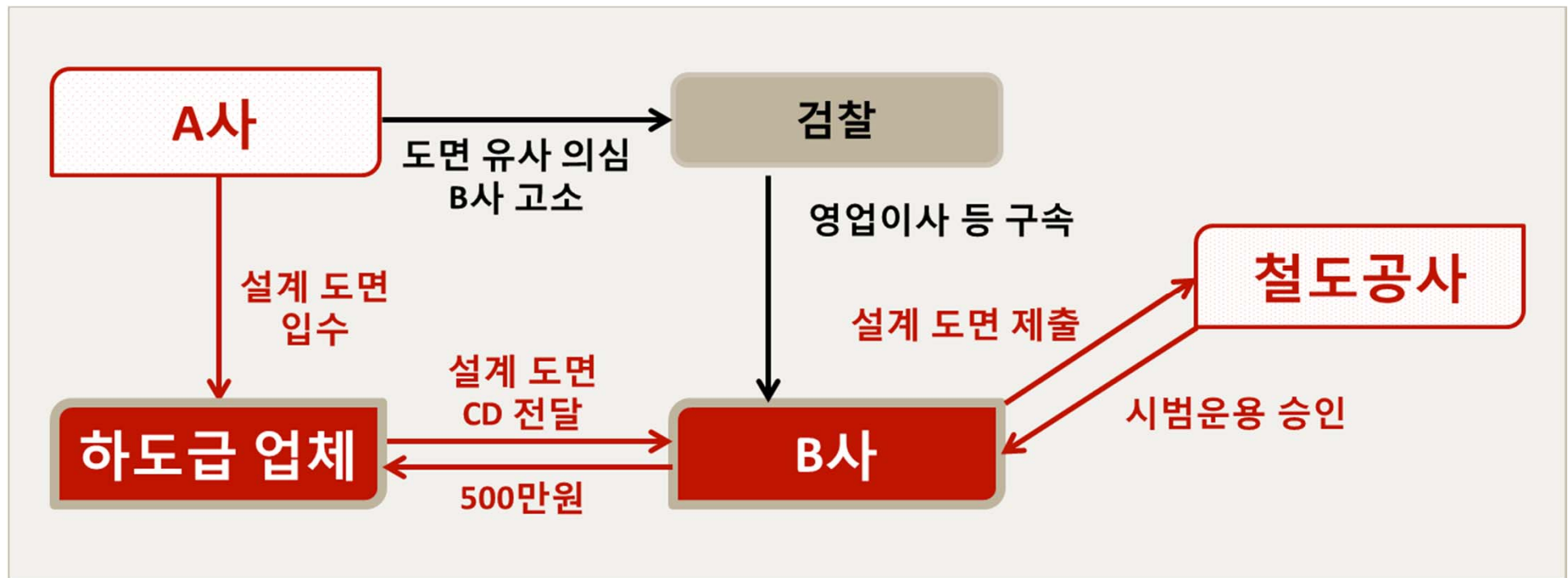
4 전 직장의 최신 기술자료 및 영업자료 유출, 전 직장 고객사 상대 제품 판매



- 형사 대상자에 대한 가압류 신청(손해배상청구권)
- 내부 공모자 벌금형 선고
- 시장 잠탈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 핵심인력 부당 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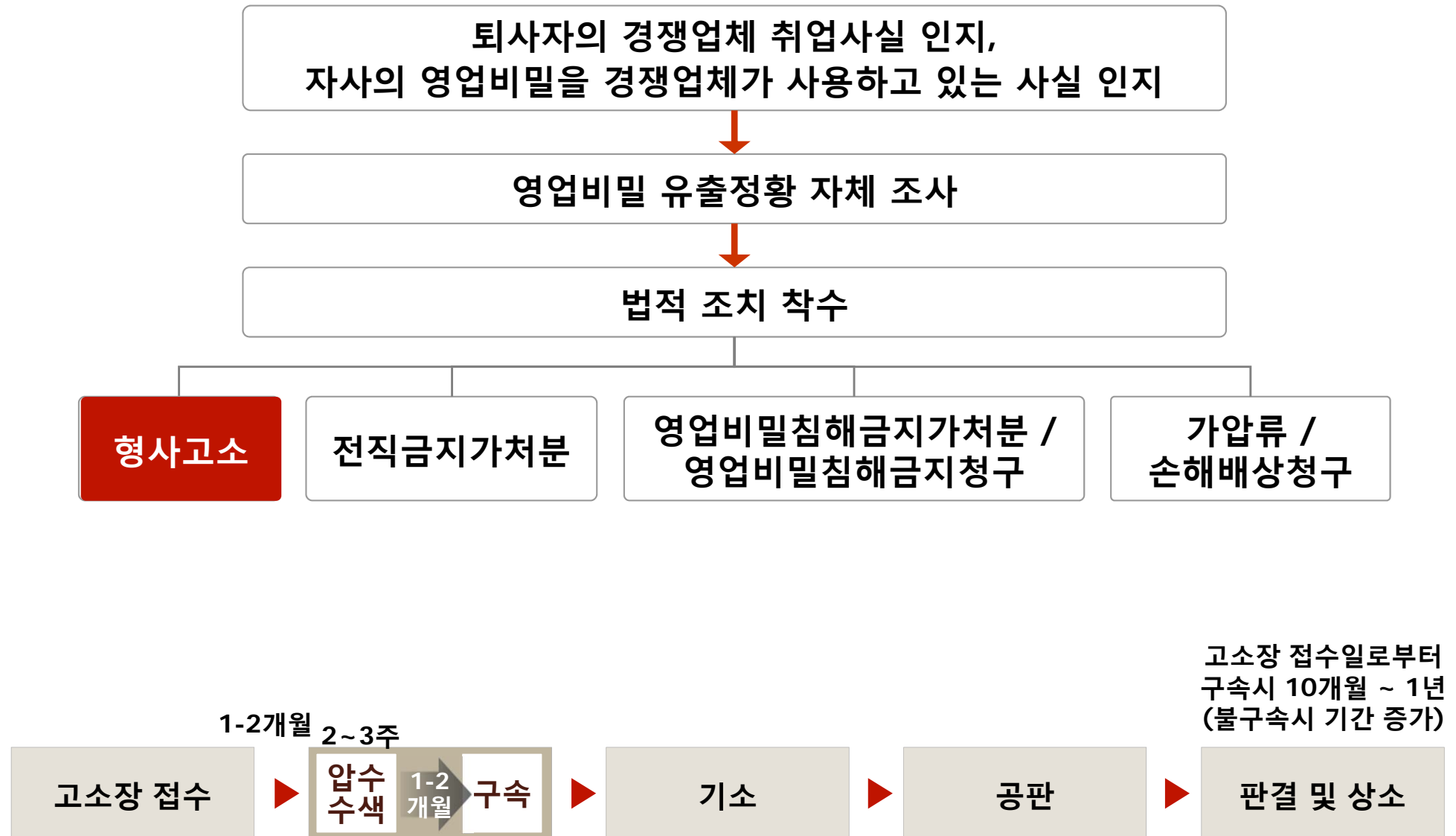
산업스파이 사례 (협력업체)

사례 3 하도급 업체를 통한 전동차 설계 도면 유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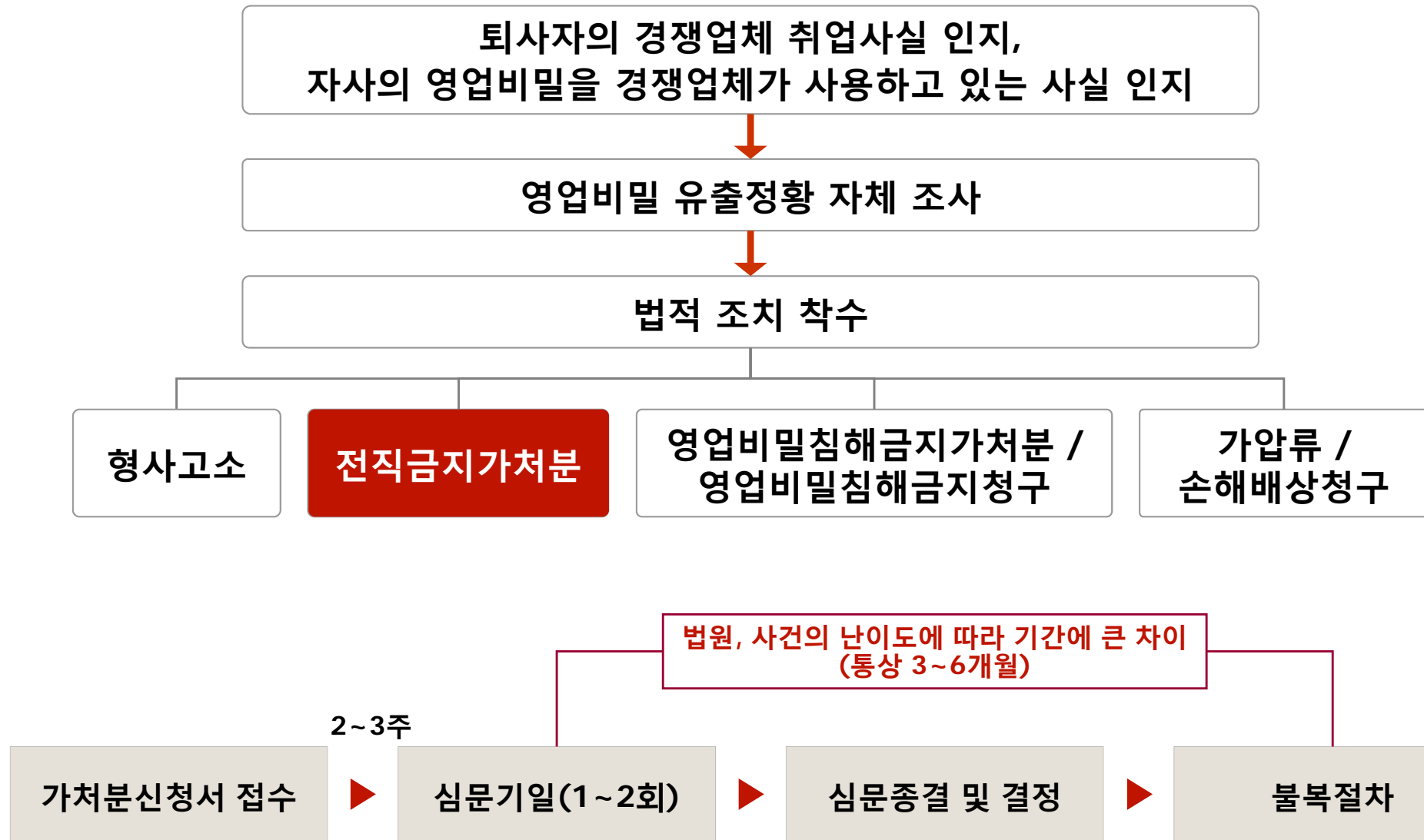


- 경쟁사가 협력업체에게 금품 제공, 영업비밀 입수 후 제품 개발 도용
- 검찰, 3명 구속 기소 등 총 8명 재판 회부, 전원 유죄 확정
- 협력업체로 제공되는 자료가 경쟁사로 유출될 수 있음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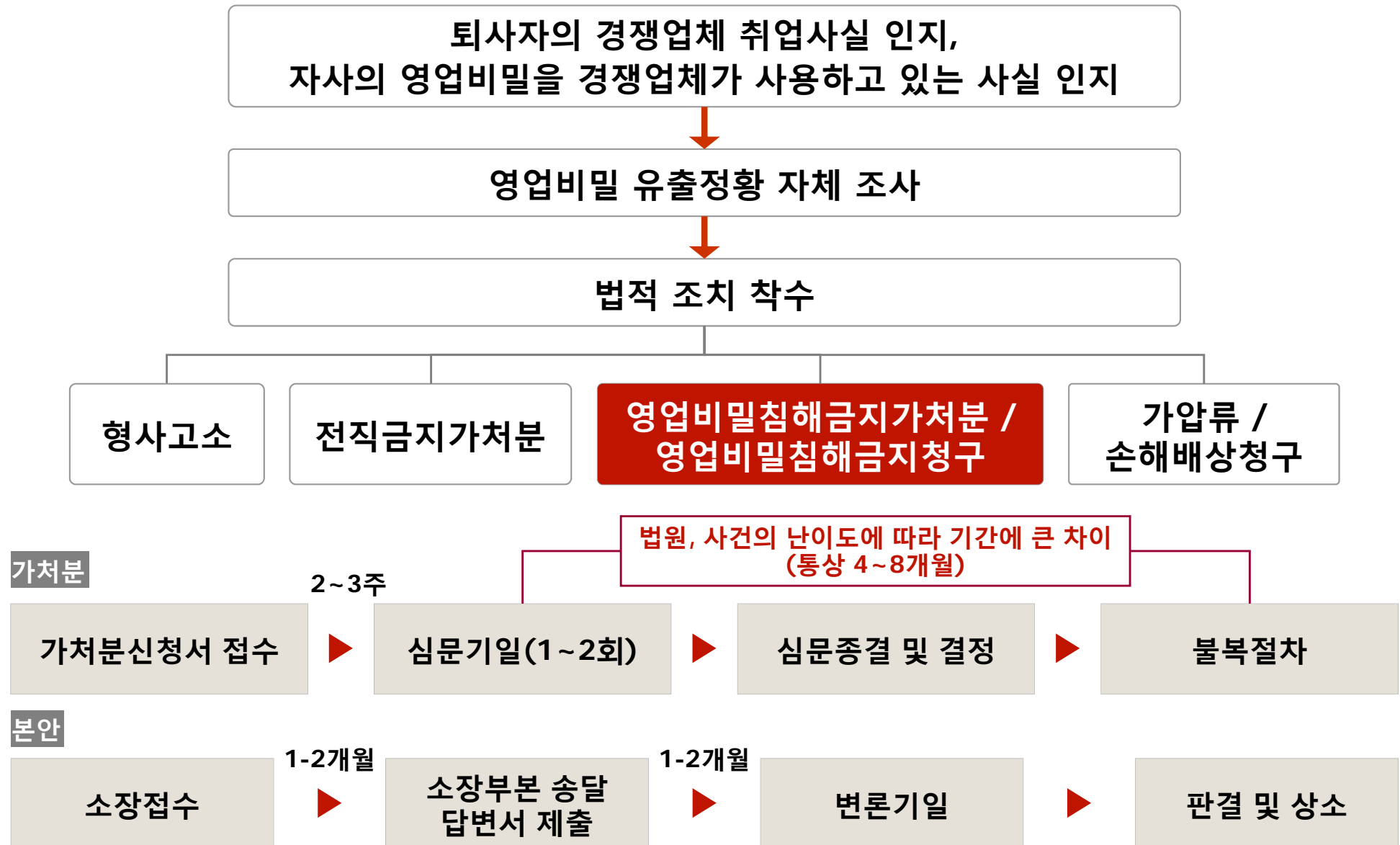
산업스파이 사건 대응 법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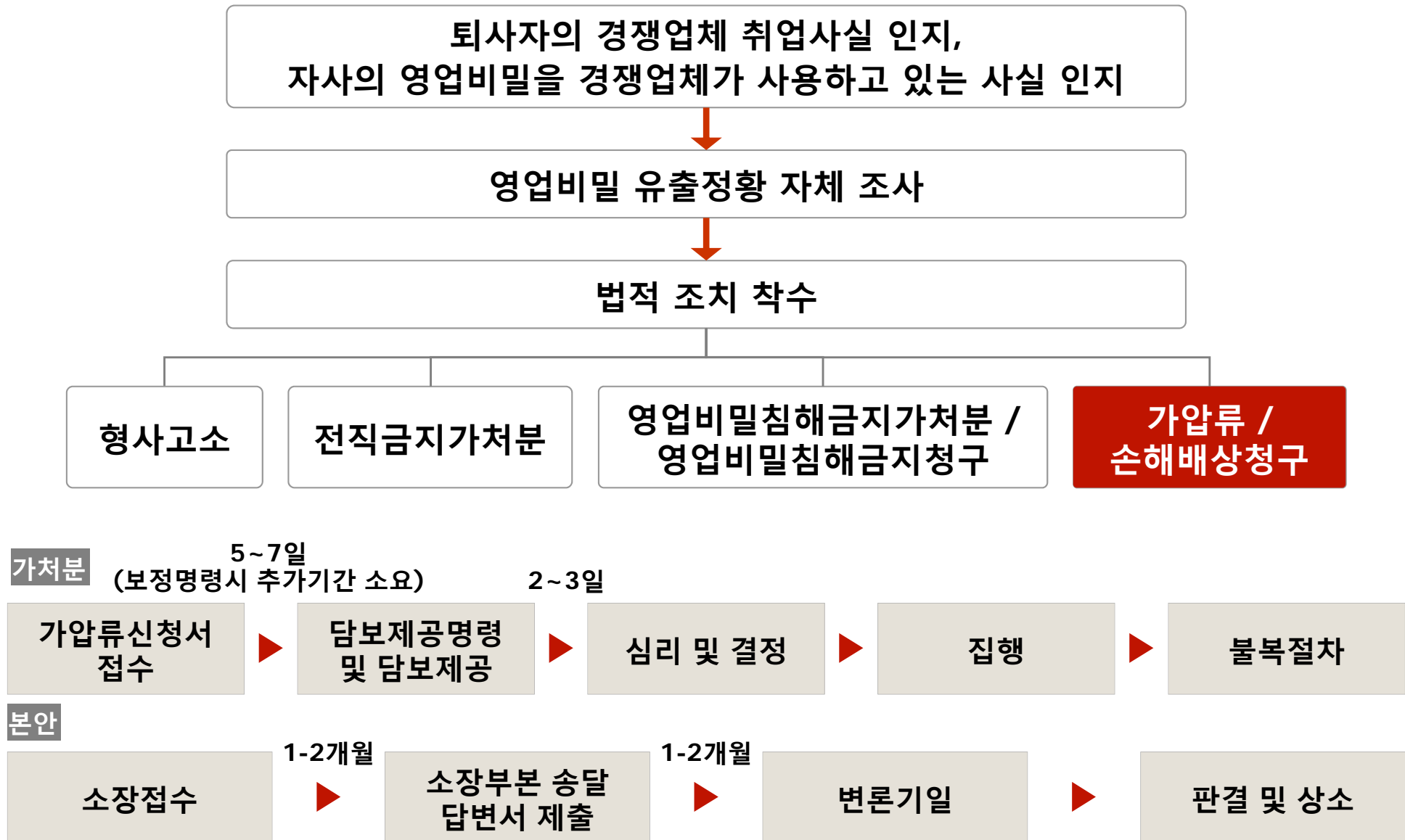
산업스파이 사건 대응 법적 절차



산업스파이 사건 대응 법적 절차



산업스파이 사건 대응 법적 절차



감사합니다

본 문서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교육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본 문서를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김·장 법률사무소 저자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